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는 모두 자본주의의 위기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3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6면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2면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안전보다 기업 이익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4면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7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 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대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홍보 배너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선별지원에 액수도 적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강동훈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뒤,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정의당·민중당 등이 선별 지급이 아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온 게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 정치인 일부도 총선을 의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스스로 '비상 국면', '특단의 대책' 등을 강조하고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100조 원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견주면, 이번 지원금은 뒤늦고 미미하기 짝이 없다. 정의당도 "찜뽕 대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우선, 정부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로 정하자 온갖 혼란이 발생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의 기준은 대략 월 소득 7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어지간한 맞벌이 가구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 가구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해 정부 사이트가 불통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중 20~30퍼센트를 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거나 자체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줄어들어서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고작 7조 1000억 원에 그친다. 모두에게 100만 원씩 52조 원을 지급해 소득 감소와 해고 위협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이는 문

재인 정부가 여전히 균형재정론에 얽매어 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훨씬 큰데 말이다.

피죄죄한 복지 확대도 '돈 퍼주기'라며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겨냥한 '곰품 살포',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지원이 대다수인 1차 추경이나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100조 원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별 군소리 없었던 통합당이나 보수 언론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난다. 이러니 통합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줄 거면 다 주는 게 낫다'고도 반발하는 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급하지 말라'라는 주장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다.

한편,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다 보니,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하고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됐다. 문재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총선 후에 국회에 상정하고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통합당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지급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그런데 보편적 재난소득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일부 좌파들이 있다. '해고 금지'나 보험료 감면 등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복지 제도를 활용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며 말이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하층 노동계급을 보호하는 '노동계급적 요구'라고 보는 듯하다. 또,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일부 개혁주의자들과 자율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단지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려 하거나 고용 불안정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 반

대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물론 기존 기본소득 논의에는 비판적으로 볼 점들이 꽤 있다. 그러나 현 위기는 지배자들도 인정하듯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가 결합된 전대미문의 위기이다.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 보장이나 기존 복지 확대를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과 대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고 위협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번 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 임금 삭감 압박을 받는 다양한 노동자들, 노동계급의 이웃이거나 친구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면 보편적 재난소득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복지의 폭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선별적이고 까다로운 관료적 제도라는 점에서도 보편적 소득 지원보다 못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삶보다 '건전 재정'과 기업 지원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주들은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를 추진할 것이다.

노동자들도 이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자신의 힘을 행사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재난 소득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 코로나19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 안전과 인력 대책 내놔야
- ★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 ★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김문성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중·노무현)의 유지라며 정치 개혁의 상징처럼 다루어왔다.

물리적으로 쇠지렛대까지 동원하며 선거제 개혁에 결사항전으로 저항했던 미래통합당은 법 통과 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리려고 한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들은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국고 정당 보조금도 수십억 원 받아 냈다(미래한국당 61억 원, 더불어민주당 24억 원). 이중으로 국가 보조금을 탄 셈이다. 이 당들이 가난한 서민이 복지예산 몇십 만 원

을 중복 수령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면 패섬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시민당은 3월 31일 연합정당 터를 낸답시고 여러 참가 세력이 낸 공약들을 모아서 중앙선관위의 총선 사이트에 올렸다가 기본소득 60만 원 공약 등이 민주당 기조와 다르다는 비판을 받자 바로 내렸다. 다음 날엔 반대로 민주당의 10대 정책을 그대로 올렸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임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또 삭제했다. 그야말로 촌극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주류 양당을 비롯한 것 이상의 정치적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 권력을 나눠 갖는 주류 양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하려고 최소한의 대의명분과 염치도 보이지 않는 것은 공식 정치가 주류 양당 간 불신에 기초해 양분돼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간층, 무당층으로의 득표 확장보다 각자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중점을 두는 것은 주류 양당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양쪽 눈치를 보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책은 기업 살리기에 강조점이 있다

4·15 총선의 쟁점

이번 총선의 배경과 쟁점은 다음 3가 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라는 보건 위기 대응 문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가 방아쇠를 당긴 경제 공황 문제다. 셋째, 문재인 정부 만 3년 시점에서 치러지는 정권 중간평가 선거다.

문재인 정부는 3월 중순까지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거듭된 개혁 배신에 이어 방역에 실패해 책임론이 불거진 탓이다. 정권 심판론이 유력한 선거 프레임으로 부상하며 통합당 지지율이 올랐다. 정부·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덮으려고 신천지 마녀사냥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회 금지, 강제 검사 등 권위주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겨우 감염 확산을 줄였다.

3월 중순부터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자 문재인 정부는 서구 정부들의 좀 더 열등한 대처 방식과 비교해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프레임을 역전시켰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반등했다. 4월 1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부 선거활동 지침은 조국 사태 등 불리한 이슈는 몰타기해서 피하고 대신 코로나 대응 성공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통합당은 경제전문가 이미지가 강한 김종인을 영입하고 정부의 “경제 실패론”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공천에서 탈락시킨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겠다”는 협박으로 후보 사퇴를 시키고 있다.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우파 정당인 제1야당이 모두 타국 정부의 실패나 자국 정부의 실패에서 ‘반사’ 이익에 기대려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지만, 이제껏 방역망이 뻗 뚫리는 것을 막은 것은 방역 과정에서 과로로 죽은 공무원들, 환자를 통한 감염도 불사하고 헌신한 일선 의료진과 보건 노동자들(특히 대구 지역)의 희생이 있어서다.

이런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감염 확산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됐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의료 인력 포함 계약직 5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대구시와 병원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서 시장경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여전하다.

해외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역류입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은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해외 여행객 등의 입국은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 교류 유지 방침은 사실은 국가간 외교와 기업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인 셈이다.

이처럼 위기의 수준이나 정부·여당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적 위기 대응 기조는 노동운동과 진보·좌파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보여 준다. 싸울 자신감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노동자와 청년들은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반면 3월 하순 여론조사들에서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은 안타깝다. 특히 정의당의 지

지율이 기대치보다 낮다. 물론 정의당 지지가 높게 나온 조사도 있고, 위기가 심각해지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회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

최근의 진보정당 지지율 저조는 노동운동이 정부의 방역 노력에 무비판적으로 협력한다는 기조 아래, 필요한 저항을 방기하며 시간을 보낸 탓이 크다. 대중 속에서 수동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진영 논리 재강화)을 막을 방파제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을 탈피하려고 민주당과의 차별화 기조를 패부각시키는 듯하다.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한 뒤 민주당의 꿈수와 비난에 맞서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이런 방향을 채택한 것은 다행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당 비판에 주춤거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 가령 비례 위성정당 공천 개입을 이유로 통합당의 황교안만 고발한 일이 그렇다.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의당이 노동계급과 청년층의 정당한 계급적 분노를 대변하고 나섰다면 지금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있었을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운동이 위기에서 노동자·서민 대중의 삶을 지킬 요구들을 내놓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계급투표 조직과 진보정당들의 선거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 살리기에 쏠린 정부 대책

정부의 서민 생계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3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액수도 불충분할뿐더러, 중위소득 서민들은 자기가 받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린다. 총선 때문에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 규모·액수 확대 요구를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이 함께 반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액이 10조 원에도 못 미치는 이 안조차 지급 자체가 5월 이후로 돼 있어서 긴급한 필요에 부합하지 못한다. 지급 여부가 아직 미정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미약한 정부 안조차 ‘현금 살포를 통한 때표’라며 반대한다.

정부·여당과 통합당 모두 균형재정(사실상 긴축)을 강조한다. 거의 모든 정부들이 경제 침체를 막겠다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재정 정책에 매달리는 건 어이없다. 선거를 앞두고도 정부의 태도가 이런 것은 국민 대중을 설득할 위기 해법과 대안이 없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지원에는 100조 원을 투입하느니, 무기명 국채를 발행하느니 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쟁점은 재정 적자 여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쓰고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다.(굳이 무기명 국채를 고려한 것은 상속세·증여세를 피하려는 부자들의 거래를 돕거나 부정한 정치자금 등 검은 돈 세탁의 의도가 의심된다.)

기업 살리기 예산이 노동자들에게 흘러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최근 산업은행 등에서 1조 원을 대출받기로 한 두산중공업이 인력 감축을 멈추지 않듯이 말이다. 무기명 채권 발행이 거론되자마자 전경련 기관지 격인 <한국경제>가 4월 1일 찬성 사설을 냈다.

경제 관료들은 재정적자를 실제로 두려워하는 듯한데, 기업주들이 소득 지원에 재정을 쓰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최근 법인세 감면 등과 함께 노동계약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주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 노동계

급의 사기를 떨어뜨려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착취율을 높이려는 듯하다. 이는 기업주들의 두려움이 크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세계시장의 침체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더 불리할 것이다.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경제 활동의 국제 이동은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자·서민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친 여파로 어떤 노동자들은 과로와 감염 위험으로 내몰리고, 어떤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하거나 임금 소득이 사라지거나 대폭 깎일 위험에 내몰린다. 영세 자영업 같은 서민층에서도 소득 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 염원 대중에게 민주당 차악론은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참가론은 오류이다. 한국노총이 민주당 후보들을 친노동 후보라며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장호중 의사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하다.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월 중에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한편, 4월 5일 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방역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이라는 이른바 족보에도 없는 단어를 꺼내놨다.

정부는 생활방역이 "일상에서 손쉽게 우리가 일종의 생활습관처럼 지킬 수 있는 방역"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물리적 거리 두기 등을 지금처럼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

지속되는 확산세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결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 커녕 미국 등지에서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다. 유럽에 이어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

원해도 사망자가 10만~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2일 부활절 전에 경제를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도 포기했다.

해외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봉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도입해 사실상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했지만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전면 봉쇄를 거론할 처지가 못 된다.

국내에서 감염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도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의정부성모병원이 폐쇄됐고,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아동 확진자가 나왔다. 구로 폴센터 집단 감염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대구와 서울·경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1000명이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지금 수준의 물리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등 다른 정부 지도자들이 가려 한 길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터진 현 상황이 이들에게 감염병 확산 저지나 이윤 보호나 사이에서 동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도 걱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정부의 지도자로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 즉 기업 이윤과 경쟁력의 손실을 참아 넘길 수 없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스스로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이윤과



1만명 넘게 일하는 기아차 공장의 현주소

사진 위) 최근 들어 공장 식당에 설치된 간이 칸막이

사진 우) 칸막이가 무색해져도, 바로 옆에서 뚫뚫이 붙어 식사 줄을 선 노동자들

대중의 보건 안전을 놓고 저울질하는 이유다. 각국 지배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태도를 숨기지 못하다 보니 대중의 눈에 이 체제와 정부의 계급적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리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둘러대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서 피로도가 높아진 측면이 크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바꾸면 보건 안전도 지키고 피로도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앞서 제시한 모든 조치들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해 온 것과 정반대이거나, 정부가 '말로만' 해 온 것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정부는 기업주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요구할 뿐 아니라 즉시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실질적인 조치를 사용자에게 강제하도록 저항하라고 해야 한다.

해고와 무급휴직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많고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노동자들이 5월에 준다는 정부의 쥐꼬리만 한 재난 '긴급'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에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장 현장에서 해고를 막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위해 싸우도록 고무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주들과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해고, 무급휴직, 개학 연기로 인한 양육과 돌봄 등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고통을 완화하기는커녕 더한층의 고통 전가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공무원 임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위층의 임금 반납 쇼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곧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도 압박할 듯하다.

이런 조처는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다. 기업주들도 경제 위기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윤이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삶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런 고통 전가를 통해 기업주들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붙잡는 반면, 노동자들은 경제가 회복돼도 밑바닥에 버려진다는 냉혹한 사실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적 자원을 지원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고통과 환멸만 남겼다. 기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이를 되풀이해 체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과 달리 '우리 모두'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이익을 보는 방법은 없다.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이익을 볼 것이고, 위기를 부르는 이 체제를 수호하려 들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계급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체제 구출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집회 금지 등 정치적 억압 강화에 반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전광훈 목사 등 꼰돌건 우파들이 안하무인으로 집회를 강행하자 이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불만도 커진 듯하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등을 근거로 '대중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 제한으로 안전을 지키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1만 명 가까이 되도록 옥외에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물리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실외에서는 바람 등으로 비밀이 흩

어져 감염에 충분한 바이러스 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하다면 충분한 간격을 두고 마스크와 장갑 등을 이용하면 감염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미미한 가능성만으로 노동계급의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공장과 사무실, 대중교통 등으로 노동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으면서도, 집회 제한 같은 억압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방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일하는 곳은 콜센터만이 아니다. 최소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부지기수다.

재난 대응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휴업을 명령해야 한다. 휴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분도 별충해야 한다.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방역 기준을 지키도록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설비를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병원 같은 필수적인 업무에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민간병원들도 통제해야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최근 대구 동산병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직원 5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이런 곳은 신속히 국유화해야 한다. 요양 병원 등 민간 복지 시설을 점검하고, 정부가 직접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중단하고 공

무원과 지자체 노동자들이 사회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학이 미뤄지고 복지 시설들이 폐쇄되면서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이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이를 내버려 뒀선 안 된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백화점 등 비필수 상업 시설은 폐쇄하고 해당 부문의 자원을 필수재 유통에 투입해야 한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재난 대처에 불필요한 생산은 중단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전자·화학 공장은 마스크·약품을 생산하게끔 전환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감염자가 급증하고 나서 전환하는 것은 너무 늦다.

해고를 막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바를 보면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박설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게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측의 생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거나,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생산량 만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측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측이 제안한 특별연장근로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세였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에 반대가 상당해 최근 노조는 일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생산 활동에 전념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다.

회사가 잘 돌아가야 노동자들도 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노조가 생산량·수익성 등 사측의 경영 고민을 함께 나눠지려는 것은 노동조건 지키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할 공산이 크다.

일부 사람들은 임금 양보(임금 삭감을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양보론을 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일방적 고통 전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코로나 사회연대기금’ 조



3월 26일 민주노총을 찾아 “다층적 대화 추진”을 약속한 청와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며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고자 한다.

성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노동자도 일정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과 지배자들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다. 지금 재계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정부는 친기업 위기 대응 기조 속에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을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할 뿐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고 필요한 요구를 쟁취해 나아가는 것이다. 노동자 양보론은 이런 투쟁 건설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반면교사 삼을 쓰라린 경험

경제가 심각한 위기일 때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양보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경험

은 한두 번의 양보가 결코 고통의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IMF를 불러들인 1998년 위기 때도 적잖은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과 성과급을 반납하면서 ‘국가 경제와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감수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건 양보로는 고용을 지키기도 어려웠다. 곧이어 정리해고와 ‘명예 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 공세가 이어졌다. 일부는 싸워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저항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위축됐다. 그나마 안전하던 공공부문에서만 무려 1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을 강조하면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법제화까지 몰아붙였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합의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대신 재벌개혁, 복지 확충 등을 얻어냈다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 뒤로 실제 벌어진 일

은 재벌·대기업이 더 부유해지고,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더 늘어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양극화만 심화됐던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 조선업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임금 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공격이 벌어졌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회사를 살려야 고용도 지킬 수 있다’며 양보 교섭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한층의 희생 강요와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어느 한 곳에서 양보가 관철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를 지렛대 삼아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려 했다. 조선업 노동자들 전반이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 요구 받는 악순환에 처했다.

세계경제가 휘청대는 지금, 부분적 일지라도 노동자 양보 제안은 고통을 완화하거나 끝내는 해결책이 못 된다. 그것은 되레 노동자들이 싸울 자신감

을 잃게 만들고 양보의 악순환만 낳을 것이다.

연대를 망치는 정규직 양보

한편, 민주노총의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면 ‘고압’되기 쉽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장,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거나 보험료를 더 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돕자는 선한 의도에서 이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양보는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도리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이 저항하지 못하고 조건을 양보하면, 나머지 노동자들도 후퇴를 강요 받기가 쉽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 일부의 양보를 기회 삼아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투쟁을 억제시키려 할 것이다.

2015년에 ILO(국제노동기구)는 정규직의 “기득권”이 공격 받은 곳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과 조건이 더 나빠졌다는 실증 연구를 내놓은 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양보하자는 제안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일지라도)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정작 연대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할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단결을 해칠 위험이 크다. 투쟁의 힘을 빼고 마비시킬 수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강화하는 진정한 방법은 조건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선 광범한 저항을 조직해 조건 후퇴를 막고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강제해 내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이정원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100조 원대의 돈을 풀면서도 민주노총이 대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제안한 요구에는 진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해고 금지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수십만 원 수준이고 그나마도 총선 후 2차 추경예산 국회 통과 관문을 거쳐 5월 중순 이후에나 지급한다는 계획이라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다.

<한겨레>는 최근 사설에서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는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 요건 완화 등 40개 개악 리스트를 쏟아낸 경총의 태도를 보

면, 기업주들이 해고 금지 합의에 응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판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이 본보기로 든 독일에서도 위기 때 노동자들이 임금 양보를 했으나 결국 득을 본 것은 기업주들이었다. 오늘날 독일은 유럽에서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들고, 일자리 네 개 중 한 개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이다.

노동운동 안에서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협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해고 금지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물론 이 제안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취약 계층의 삶을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3월 31일에는 민주노총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회안전망 재정비, 총고용 유지, 공공보건의료 대폭 강화 등 7대 요구를 발표했다. 여기에 참가한 일부 단체들도 요구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사회 단체들의 요구들을 성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문재인 정부는 경제침체 장기화로 줄어든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켜 주려고 규제 완화, 임금 억제

와 노동개악을 적극 추진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일정 성과를 낸 덕분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를 압박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 볼 만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지 못한다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한층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자신이 노동자 공격을 가속화할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양보를 강요받기 십상인 사회적 합의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1. 흔히 코로나19 대응행은 정상 작동 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다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다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톱 월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축산이 확산되고,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야생동물들과 조류 군집이 서식하는 깊숙한 야생으로까지 시장과 자본이 침투하면서 감염병 대응행을 위한 조건이 형성됐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사회와 자연의 물질대사간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 파괴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도 이것의 좋은 사례다. 코로나19 대응행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것이며, 극복해 내지 않으면 약 40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런던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의 추산).

2. 이번 대응행에 대한 정부들의 대응도 자본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신자유주의적 진축을 추진하면서 긴급 재난 대비 계획을 최소화하고(심지어 대응행 대응팀을 해체한 트럼프의 사례도 있다), 보건의로 체계는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겨놓았다. 정부들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권위주의적 통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악명 높은 “집단 면역” 전략은 전자의 사례다. 이 전략은 바이러스가 주민들에게 퍼지도록 내버려 뒀서 취약한 집단의 생명에도 도박을 하겠다는 것으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최초로 시도했고 여전히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실패했기 때문에 몇몇 아시아 국가들처럼 추적·검사·처치 전략을 취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포화된 중환자실을 가동하느라 분투하는 보건의로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3. 이번 코로나19 대응행은 또한 대규모 경제 불황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불황은 심증발구 2008~2009년 대불황보다 심각할 것이다. 이는 어떤 자연발치 때문이 아니다. 이윤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외출 제한이나 봉쇄 같은 조처는 필연적으로 생산에 지장을 준다. 2020년 초 중국 경제가 정치되면서 세계적 공급 사슬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응행이 되면서 세계경제의 나머지 부분도 멈추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제국라면 이런 위기가 지금 벌어지는 것과 같은 대량 실업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시장이 극도의 패닉에 빠진 것은 이미 세계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경제는 각종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신용과 막대한 기업 부채로 간신히 유지됐다.(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됐다.) 2007~2008년 금융 위기가 최고조일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의 도파’ 현상이 일어나 시장이 얼어붙고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현재 정부들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개입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임시 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스페인의 대형 전시장

하기 시작했다.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유동성(자금)을 쏟아붓고, 기업(특히 대기업)들을 위한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런 지원책에는 해고된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도 종종 포함돼 있지만, 지원의 액수와 범위는 불충분하고, 점증하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더 스로로 “자영업자”로 규정하기를 종종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미등록 이주민들을 배제할 때가 많다. 역시 우선순위는 이윤을 지키는 데에 있지. 평범한 노동계급 대중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데에 있지 않다.

4. 정부는 코로나19 대응행에 직면해 전쟁 비유를 동원하며 소위 ‘국민의 공동된 이익’을 지키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위기의 부담은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보건의로 노동자들은 더 악화됐다.) 2007~2008년 금융 위기가 최고조일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의 도파’ 현상이 일어나 시장이 얼어붙고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현재 정부들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개입

더 큰 규모로 계속 조입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들이 일하는 조건 속에서는 대개 물리적 거리 두기도 불가능하다. 대형 마트, 약국, 물류 창고, 배달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버스, 열차, 필수제품 부문, 농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 저개발국 도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이중재한영 때문에 순식간에 수입이 끊겨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인도의 도시들에서 이주노동자 수백만 명이 필수적으로 탈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코로나19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자본주의도 노동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냉혹하게 환기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 노동이 새로운 위협에 처해 있다.

5. 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라는 미더운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겐과로 강요받을 때가 많다. 일부 노동자들은 인터넷으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수많은 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들은 계속 일터에 나와 더 강도 높고

쳐진 참상에서 드러났듯이 이주민과 난민들은 특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 각국 정부는 더 억압적인 권한으로 무장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당면 위기가 끝나도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국과 중국의 국주의적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6. 다시 말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자본 축적의 최근 형태가 조성한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근저에 있는 계급 적대와 자본가간 경쟁을 통해 위기를 부른다. 그러나 좌파와 노동운동의 공식 지도자들은 국민적 단결이라는 정부의 호소에 굴복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경제 살리기 조처를 환영했다. 그런 조처들이 생명이 아니라 이윤을 지키려고 고안된 것임에도 말이다. 이런 대응이 노동계급의 동원을 해체하는 효과를 났음에도, 여러 노동자 집단이 행동에 나섰다. 특히, 프랑스·이탈리

아·미국의 노동자들은 비필수 작업장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조업을 지속하는 곳에는 보호장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계급적 대응을 더 광범한 행동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강령으로 일반화해 이를 투쟁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7. 그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

-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여 보건의료 지원, 환자 치료와 간병인 보호에 필요한 장비의 생산, 대중에게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 데에 자원을 재분배하라.
- 필요에 기초해 영구적으로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누진세로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라.
- 군비 지출을 대거 삭감해 이러한 재분배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라.
- 실제로 대중의 복리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을 필수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출퇴근 방법과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모든 비필수 업무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
- 취약 계층 지원, 식량·의약품·기타 생활필요의 적절한 분배를 지역사회가 조직할 수 있도록 국가(그리고 지방정부 당국도) 재정을 지원하라.
-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무상으로 국유화하라.
- 희생양 삼기 반대.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난민에게 자가격리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라. (한시적이거나 난민들을 영주권자로 취급하기로 한) 포르투갈 사례를 따라라.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한다.) 이주민·난민에게 체류권을 보장하라.
- 시민적 권리 옹호. 경찰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지 말라. 지역 주민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집행하게 하라.

8. 코로나19 대응행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앙겔라 메르켈, 보리스 존슨 같은 자들이 이끄는 우파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에게 금지됐던 영역을 침범해,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인수하여 보건의로 비상사태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도록 제조업 생산을 재편하게 했다. 이런 정책들은 불충분하고, 자본주의를 보호하려고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지배적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2019년 아프리카 홍수, 아마존 열대우림 대체재, 2020년 초까지 이어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처럼 이번 대응행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가 얼마나 자연을 파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진정한 사회주의, 즉 노동 대중이 민주적으로 세계와 자원과 생산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는 가능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하게 환기시킨다. 이런 재앙을 배양하는 자본주의적 “정상 상태”로 물아가서는 안 된다. 이번 대응행은 자본주의의 진정한 파괴력을 보여 준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다. 그러나 강력하고 좌파적인 정치적 대응은 전혀 다른 세계를 위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그런 세계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

2020년 4월 2일
국제사회주의경향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만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보완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월 28일쯤에는 인도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 수십만 명이 격리기간에 굶주릴 것을 걱정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귀향하려 나섰다.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벌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경제가 멈춰지자 밥자가 거의 또는 전혀 제공되지 않자, 많은 사람이 고향집으로 가겠다고 마을 먹었다.

버스터미널은 [귀향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운송편은 버스가 없었다. 사람들은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는 족히 되는데도 고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인도 동부 비하르주(州)에서 델리로 이주해 삼륜차 운전장을 하는 람 니바스

아다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주인은 매일 초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 갑니다. 월세를 안 내면 단박에 나를 쫓아낼 겁니다.”

“저는 하루에 450~500루피[한화로 약 7300~8000원]를 버는데, 지금은 외출·이동 제한령 때문에 한 푼도 못 벌어요. 사나흘 후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겁니다.”

혼란상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대도시의 각급 학교를 수용 시설로 전용하고 식량과 생활필수 배급소를 차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수용 시설들에 최대 6명이 지낼 수 있는 작은 방들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대규모 재해 구호 기금 계획도 세웠지만, 이 기금은 잇따른 우파·종교파 정부들 아래에서 고갈됐다. 그래서 현재 위기에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방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모디가 주정부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라고 주문하는 이유다. 중무장한 군대가 도시를 벗어나는 주요 도로들을 차단해 긴

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올해 2월 지방선거 당시 모디의 인도국민당(BJP)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인도 중부의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는 여성 경찰관 한 명이 도시를 탈출하는 노동자를 공격해 [대중의] 분노에 불을 뭇겼다. 이 경찰관은 노동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올라타서는 그의 이마에 “저는 봉쇄령을 어겼습니다. 저를 멀리하세요.”라고 적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에서는 현재 노동자 수천 명이 검문소에 발이 묶여, 향신료 작물을 수확하려 가려만 귀향길이 막혔다. 이들은 왕랑한 도시를 뒤로 한 채 식량도 물도 없이 방치돼 있다.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이들의 귀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3월 31일 현재 인도는 전염 수준이 비교적 낮음에, 확진자가 1000명 이하고 사망자는 25명이다. 몇몇 의료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리라 전체가 위험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이상으로 굶주림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헝가리: 극우 정부가 독재를 선포하다

3월 30일, 헝가리의 극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빌미로 사실상 독재를 선포했다.

극우 빅토르 오르반이 이끄는 동맹당 정부의 행정명령 통치[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비슷하게 정부 명령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승인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모든 보결선거와 국민투표가 유예됐다.

오르반은 이로써 정부가 바이러스를 막는 데 필요한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중을 “자극·선동”할 수 있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면 누구든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 권한은 무기한으로 부여됐다. 권한 포기(여부와) 시점이 사실상 정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각국 정부가 권력 강화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 주는 경고다. 아직 영국 보

수당은 친구 오르반만큼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당의 코로나바이러스특별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람들을 불심검문하고, 괴롭히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보안 기관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더 많이 열람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조처는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통과됐다. 노동당은 기껏해야 6개월 후 재검토 조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단 정부가 새 법안 통과에 성공하면 이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다.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파업과 탄압

짐바브웨

3월 25일 아프리카 남부 짐바브웨의 간호사·의사들이 개인 보호장비 부족을 규탄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짐바브웨병원의사연합대변인 티파와 즈바카다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즈바카다는 이렇게 말했다. “영웅적 행위와 자살 행위는 다른 것임이니 먼저 개인 보호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환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파업에 동참한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부 장관이 앞선 개인 보호장비 지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짐바브웨전문간호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의 우려에 걸맞는 긴급성이 없는 듯하다. 그 때문에 모든 간호사들이 즉각 임무를 중단할 것이다. 이는 고용주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긴급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μονη 있던 쟁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9년 8월 파업 당시 전문의들은 짐바브웨 병원에서 “소리 없는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반향고, 장갑, 주사기 같은 필수품도 없이 일해야 한다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3월 27일 3주간 이동 제한령이 시작된 뒤 남아공 경찰은 요하네스버그의 노숙인들을 단속하며 몇몇 노숙인들을 경찰관으로 구타했다. 남아공 경찰은 수퍼마켓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고문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3월 28일에는 군대가 요하네스버그 인근 알렉산드라 흑인 거주구에 있는 대형 노동자 쉼터를 급습했다. 이동 제한령 위반자가 있다는 혐의가 명분이었다. 남아공 전역에서 최소 55명이 체포됐다.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조처에 대해 정부는 수만 명이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 29곳의 “주민 수를 줄

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거개발부는 주민들을 시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자촌 주민 운동 단체 ‘아바랄리 바세몬토로’는 잔혹한 강제 퇴거 조처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보건 위기 기간에 모두들 집 안에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빈민들의 집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에도 저항 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거주민들을 조직할 것이지만, [법준 없이] 저항할 것이다. 집이 파괴된 사람들로서는 집이 있던 곳을 다시 점거하고 집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98호 / 번역 김준호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취악만 만들지,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냉혹한 무능뿐일 테다.

그러나 이런 근래 우파 정치의 어릿광대 왕들을 보느라, 더 주류인 신자유주의 기구들의 지독한 행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정치인이자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자유 세계의 진정한 지도자”로 묘사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행은 유럽연합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유럽연합은 미합중국에 비견되는 유럽 연방 국가를 목표로 삼아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연합”을 추구한다고 표방한다.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기관들(대표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은 자본주의의 국민국가들의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을 주도하는 것은 더 강력한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응행에도 어설픔게 대응했다.

첫째, [유럽연합이 아니라] 국민국가 정부들이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유럽연합 기구들보다 더 많은 자원과 정보성을 지니고 있다.

임금 제한을 결정한 것도 국민국가들이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은 각개약진이었고 불균등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외출 제한과 임금 제한을 피하면서, 많은 원성을 자아낸 존슨 정부의 “집단 면역” 전략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팬데믹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는 3월 초에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응하지 않았다. 중국만이 의료 물자와 전문인력을 보냈을 뿐이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서방으로 향하던 구호물자 일부를 체코가 탈취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이 뽐내기 좋아하는 “유럽의 연대”가 무력할 일이다.

불확실성

물론, 경제 정책 상의 대응도 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가 2008~2009년 대불황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 수축을 앞두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는 듯하다. 세계 금융 공황을 예측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명인 누리엘 루비니는 1930년대보다 훨씬 심각한 “대(大)대공황”을 경고하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측면은 이 재앙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경제에 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리시 수단이 현재까지 네 차례나 잇달아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다음 회계년도에만 2000억 파운드[약 3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일부는 분명 빌려서 폐쇄야 할 것이다.) 2018~2019 회계년도의 적자 규모는 255억 파운드[약 38조 원]였다.

독일 연립정부는 3560억 유로[약 477조 원] 규모의 추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민소득의 10퍼센트 정도 되는 규모다. 독일 정부는 경제적 미신에 기반을 둔 적자재정 금지 원칙(이른바 “검은 0” 규칙)을 세우려는 유로존에 이를 강요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원칙을 어기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회원국들은 2012년 유럽 재정협약 같은 제도를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예산을 단속하고 국가 부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지난 유로존 위기의 추악한 유산으로, 이 협약 때문에 당시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에서 긴축이 강요됐다.

지난주 유럽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의회에서도 비슷한 형국이 펼쳐졌다. 주로 남유럽 국가들이 한 편을 이루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메르켈이 지지하는,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의 소위 “한자 동맹”에 의해 좌초됐다. 이로써 경제가 비상사태인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건전화책 송배가 다시 한 번 승리했다.

좌파 성향의 전 그리스 재무장관 이annis 바투라키스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놀랍지 않다.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브렉시트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영국이 그 이유로 불렀을 망정 옳은 일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98호 / 번역 김준호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사이먼 바스케터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 · 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 · 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3월 초 비공인 행동 물결로 조업이 중단됐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가 개선됐다.

정부와 노동조합들은 협상에 나서 조업 지속을 합의했다.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는 멈추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약 80개 산업 부문을 [국가 공급망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부문’으로, 노동자 약 1200만 명을 ‘필수 노동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조업 지속이 흔한 일이 됐다.

롬바르디아주 금속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지정한 필수 산업과 필수 노동자들의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하고, 중요성이 의심되는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화학섬유노조(UILTEC) 위원장 파올로 피라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합의로 여러 기업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 다수는 적절한 안전 규칙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석유

금속 노동자들이 파업한 때에 맞춰,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 있는 대형 창고에서 아마존 노동자들이 거둬직장 이탈 투쟁을 벌였고 주유소 노동자들과 소유주들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이 기사를 쓰는 3월 31일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간신히 주유소가 계속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위기 때문에 조업 중단과 안전 조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이 재개됐다.

노동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주의 핀칸테리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은 3월 19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행동은 같은 지역의 다른 조선소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주에 있는



이탈리아 보건의로 노동자들은 전국적 파업에 연대하는 뜻으로 1분 작업 중단에 동참했다

일바 제철소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부족 때문에 열흘 파업을 선포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 연맹인 USB도 꼭 운영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 모두에서 조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전국적 총파업을 벌였다.

USB는 수십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인데, 주로 아마존 · TNT 등 유통기업 노동자들과 농장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좌파 정당 모두가 이 행동을 지지했다.

USB는 응급의료 노동자들에게 상

징적 의미에서 1분 작업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조합원뿐 아니라 소방관과 보건의로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조합원들도 이 조치에 호응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98호 번역 김준호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험을 키운다

양효영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량 회사 관리자만 면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 대책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강제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콜센터들은 민간위탁, 하청업체 구조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 안전과 재택근무를 위한 설비 등에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 노동부 대책은 이런 무책임 속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상담사의 8시간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평가하여 도급비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파도 연차, 반차, 조퇴를 내기가 힘들고 유급 병가가 없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할 시 퇴사를 각오해야 합니다.”(3월 19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국

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김숙영)

그래서 닭장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내내 비말에 노출되는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집단 감염을 낳았는데도, 재택근무는 소수 사업장에만 도입됐다. 여전히 수많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출근하는 현실이다.

반면, 재택근무를 실시한 사업장들에서는 오히려 노동강도가 올라갔다. 사측이 재택근무 시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안 그래도 휴식시간이 적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니 아예 없어졌다”고 토로한다.

재택 “감옥”

실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지자체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 상담사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한 도서 업체 콜센터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부가 감사한다고 했을 때 사측이 대청소를 하며 부산을 떨었지만, 저희 사업장에는 안 왔어요. 그 이후로는 사측이 예방을 위해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재택근무가 실시됐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콜 할당량이 출근에 비해

1.5배입니다. 이걸 못 채우면 집에서 야근을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원래도 휴식 시간은 없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니 아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재택근무인가요? 재택 감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측은 뒤늦게 유증상시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지만, 영업, 실적, 콜수 등 업무 압박은 여전히 업무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도 한 달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재택근무를 출퇴근 근무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3월 26일 희망연대노조 CJ텔레커뮤니티 기자회견 중)

이 노동자들은 “졸속 정부 대책으로는 감염 확산도, 노동조건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원청 책임 강화, 실적 성과제 폐지, 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3월 마지막 주에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콜센터 노동의 외주화 남발은 빼곡한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휴식,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의 원인”이라는 노동자들의 말처럼 근본적으로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해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위탁 콜센터의 정규직화 외면한 문재인 정부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콜센터 중 극소수만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

정부는 소관 기관이 알아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라며서 그 대상이 되는 정규직화 ‘심층논의 필요사무’를 분류하겠다고 했었다.

최근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고용 전환 논의를 하기로 한 곳은 겨우 13곳뿐이다. 이 중 콜센터는 6곳으로 극소수다(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대구광역시청,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각종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 있는 수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또다시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민간위탁(3단계 전환 대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떠넘겼다. 사실상 정

규직화 포기 선언이었다. 조금 기다리면 정규직화 차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었다.

이런 정부 방향 속에서 지자체, 공공병원 콜센터들도 스리슬쩍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한 공공병원 콜센터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고 전화가 폭주해서 너무 힘든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까지 지정돼 힘들다. 병원은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왜 정규직 전환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19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조들은 정부 · 공공기관 · 지자체의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에서 배운 바가 있다면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이정구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 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 청구가 330만 건을 기록했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1982년 9월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67만 건)보다 4배가량 많은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정기에도 66만 건에 그쳤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올해 6월까지 미국 내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실업률이 30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실업률은 25퍼센트였다.

코로나19의 발병지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실물경제는 거의 붕괴 수준인 듯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1~2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퍼센트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위축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를 52라고 발표하고, 3월 중소제조업의 경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지수 역시 50.1을 기록하자, 경제가 V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V자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아직도 중소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계 기업들이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포드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수준, 즉 정크본드로 강등됐다. S&P는 뉴욕주의 대형 소평물 2곳과 항공사 관련 회사채 100여 개의 신용등급도 내렸다.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지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S&P는 올해 세계경제의 제로 성장을 예상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을 각각 마이너스 2.8퍼센트, 마이너스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만이 3.3퍼센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조차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국가기구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IC)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중국 경제가 2.6퍼센트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 전망 논쟁

경제기구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경제가 V자 반등이나 더딘 회복인 U자나 아니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L자나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נק기는 "다음 분기에는 매우 가파르고 짧은 침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가 금융위기나 대공황이 아닌 자연재해라는 게 그 이유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이나 해지펀드인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낙관론자들도 1987년 10월 19일("검은 월요일")에 증시가 폭락한 뒤 몇 달 후 회복된 것처럼 이번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은 마치 경제가 한두 달간 휴가를 다녀온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두 달의 휴가 뒤에 모든 것이 정

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실업자가 폭증하고 기업들이 도산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반면 2008년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얻은 뉴욕대학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더 심각한 대공황"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까지의 경제적 피해가 2008년의 경제 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그는 코로나19를 올해 안에 억제하지 못할 경우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부양책

각국 지배자들은 서둘러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이미 제로로 낮췄고,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회사채는 매입하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2조 2000억 달러(연방 예산의 절반이고 미국 GDP의 10퍼센트 수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또다시 2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모든 게 시행된다면 경제 침체를 막는 데 미국 GDP의 20퍼센트를 투입하는 것이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유로존 국가들도 서둘러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당분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로 물건을 당길 수는 있

지만 밀 수는 없듯이, 경기부양책이 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기업과 정부의 부채는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부채 규모는 2008년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다.

경기순환 때문?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전부터 이미 세계경제는 취약하고 부진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수익성은 낮았고, 이윤은 기껏해야 정체해 있었다. 국제무역과 해외투자도 증가하기는커녕 무역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소폭 감소했다. 경제가 호황이라던 미국도 2019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40년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본의 이윤율 하락이 아니라 경기순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세계경제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틀렸다.

전후의 장기호황이 끝난 뒤 세계경제는 1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 만성적인 불황 상태를 보였다. 2008년 이래 13년 동안에도 세계경제는 정체와 부진을 거듭했다.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을 보이려면 불황기에 대규모로 자본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자본의 규모가 거대해졌고 국가와 자본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으로 심각한 위기로 빠지는 것을 유예하기는 했지만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오지는 못했다.

코로나19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생산 영역에 먼저 충격을 줬다. 글로벌 생산사슬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어서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로 대표

되는 석유 수출국들이 손실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GDP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높은 생산비 때문에 저유가의 타격을 먼저 받을 것이다.

3월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지배자들은 협력과 신뢰의 재건을 다짐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제국주의적 갈등과 긴장은 높아질 전망이다. 화상 회의에서 시진핑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 인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제한 없는 무역을 촉구하며 트럼프를 간접 비난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했지만 사우디는 증산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하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데서는 일치단결해 있는 듯하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량 해고와 무급휴직 또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늘어나고 있다. 이참에 기업들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애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도 타격을 받았지만 노동자 대중의 삶도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노동자 대중이 받고 있는 피해를 완화하는 조처들(예를 들어 〈노동자 연대〉가 밝힌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긴급하게 조성한 기금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파업과 같은 투쟁을 할 수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과 이를 돕는 정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할 수 있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이런 저항들을 확대해 가야 한다(관련 기사 6~8면을 보시오).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정선영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 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뉴딜이라는 말은 2007년에 처음 등장했고,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처음 제기했다. 오바마의 그린뉴딜은 녹색 경제 성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온건한 개혁 정책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한 그린뉴딜 정책은 그보다 훨씬 급진적인 제안이다. 예를 들어 샌더스는 2030년까지 전력·운송 부문을 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 10년간 16조 30억 달러(약 1경 9500조 원)의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3.5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은 지난 10여 년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기후 위기와 관련 있다.

수개월 동안 호주를 불태운 거대한 산불,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60퍼센트를 침수시킨 초강력 허리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15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어간 일들...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기후 위기를 멈춰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최대 속도로 늘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박근혜 때 결정된 신규 발전소 건설은 지속하고 있다. 그것도 대기업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추진해 사실상 발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탄소 감축 계획은 없이 30년 뒤에야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막연한 선언에 그쳤다. 탄소세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수소산업 육성처럼 친환경 공약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전혀 없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같은 반환경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

주류 양당과는 차별되게 정의당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급진적 산업 재편 방안을 담은 정의당의 그린 뉴딜



(좌) 2019년 9월 21일 열린 기후 위기 비상행동 (우) 호주 전제 숲의 14퍼센트를 태워버린 호주 산불

급진적 성격, 모순적 방향

정의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2018년 유엔 ‘기후 위기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권고를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2030년에 전기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에는 지지할 만한 정책들이 많다. 정의당이 제시한 것처럼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기술과 방법들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실제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이루려면 현재의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의 급진적 성격과 모순되는 방향들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 위

기 극복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도 이루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녹색’ 산업에서 기술력을 높여 한국 자본주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의당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창출해 성장을 이끄는 것과 불평등 해소 등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를 혁신가형 국가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는 현재 정의당이 국유화와 같은 정책을 강조하는 좌파 개혁주의적인 지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 원리를 좀 더 인정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즉, 자본 축적)은 노동자 착취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정의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지향과 긴장을 낳을 것이다.

실제 그린뉴딜 공약에서도 경제 성장과 친환경을 조화시키려다 보니 “전기차 1000만 대 시대” 같은 공약이 강조돼 있다. 물론 전기 생산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기차도 지금과는 다르게 친환경적 운송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교통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개별 가정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철도, 버스 등 공공교통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뉴딜정치동맹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이 “미래세대, 새로운 산업, 시민사회 및 노동자와의 정치동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 기업주 등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본가들도 결국 화석연료 기반 산업들을 친환경 산업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 지배자들 중 일부는 이대로 화석연료 체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자본가들은 환경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한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지난 수년간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산업들은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2.5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화석연료와 핵발전도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연간 1.4퍼센트씩 성장했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워낙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산업들은 자본주의의 장기 성장 전망보다 단

기적 이익에 몰두한다. 지금도 미국의 지배계급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저유가 상황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셰일가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셰일가스 기업들은 미국 투자위험 등급 채권의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파산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세계화돼 있는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 것도 중국과의 경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쟁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간다면 하더라도 자본가들은 눈 앞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기업들이 이윤 압박을 받을수록 자본가들은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늘릴 정책들을 반대할 것이다. 지금도 자본가들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단순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을 전환하리라고 보는 것은 공상적이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을 전환하려면 기업주 및 자본가에 맞서는 거대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투쟁이 성장해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를 근본에서 거부하고 인류의 필요에 따라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때에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 대응 운동에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이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이윤 논리에 맞서 계급투쟁을 전진시켜 간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이는 해고에 맞선 투쟁, 임금 삭감에 맞선 투쟁, 공공의료와 복지를 요구하는 투쟁 등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이런 투쟁들에서 노동계급의 권리를 옹호하며 계급 투쟁을 전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넓히려는 탄소세 인상과 이에 따르는 전기요금 인상을 노동계급이 아닌 자본가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계급 타협적 지향 속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다 보니 모순도 존재한다.

앞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관련한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이 전진할 좋은 토양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이예송

필자 이예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 등에서 4년 가까이 거주했다.

나는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3월 16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2월 중순부터 불안감에 시달렸다. 미국은 민간의료 위주라 의료 환경이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비효율도 너무 심해 의사 한 번 만나기도 힘들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특히 나처럼 보험이 없거나 보장성이 극히 낮은 보험 대상자인 미국인 5분의 1에게는 더한층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독감과 다를 바 없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했지 방역에는 열의가 전혀 없었다. 모든 일상이 똑같이 돌아갔다.

3월 중순이 되자 내가 거주하던 캘리포니아주(州)에서도 확진자가 늘었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서 증상을 호소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젊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애초에 검사를 거부당했다.

어찌어찌 검사를 받아도 검사비가 약 500만 원이 청구된다. 보험으로 일부 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본인 부담금으로 약 160만 원을 내야 해,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다.

그 와중에 신문에는 ‘영화배우 톰 헝크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포츠 스타 누구, 정치인 누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들 얼굴에 기침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쓰디쓴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에 떠돌 정도였다.

나중에야 캘리포니아주정부가 검사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나마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다.

4300만 원

만약 증상이 심해서 입원이라도 하면 수천만 원이 청구될 판이다. 보험 가입자라 해도 치료비를 빼고도 입원비만 보험 보장 범위에 따라 하루에 수십~수백만 원을 내야 하고, 응급실 이용료 220만 원도 별도로 내야 한다. 심지어 병원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시설 이용료까지 내야 한다!

〈뉴욕 타임스〉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젊은 여성이 입원 치료를 받고 의료비로 43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얼마 전 17살 한국계 미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것도, 의료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병원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생각을 아예 접었다. 약국에는 감기약이 동났고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치료법’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뉴욕 타임스〉는 이런 소식도 전했다. ‘남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밤새 열이 나고,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해도,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다며 입원을 거

부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때나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지금 미국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장비도 너무 허술하다. 의사·간호사들이 SNS에 개별적으로 마스크 기부를 호소할 정도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현금 1200달러(약 15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 모두 원룸 월세가 250만 원 꼴이다. 보험료도 4인 기준 매달 220만 원 이상 내야 한다.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져 해고된 사람들도 많다. 도대체 기업을 지원한다며 퍼붓는 돈, 국방비로 쓰는 돈, 그 많은 돈을 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없나?

이런 상황이라 사재기가 심해지기도 했다.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음식을 쌓아두고 칩거할 생각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행동을 이기적이라 비난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사재기가 정말 문제라면 왜 정부가 식량을 배급하지 않았는가?

한편,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고, 주류 언론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룬 기사에 마스크 쓴 동양인 사진을 첨부한다. 이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공격이 늘었다.

트럼프 정부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해 이런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는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앞에 줄지어 선 냉동 트럭의 내부 모습.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놓여 있다

저항

이런 상황 때문에 곳곳에서 상호부조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동네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해열제를 나눠 주고 먹을 것이라도 문 앞에 놓기 위함이었다. 힘든 시기에 정부는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 스스로 연대를 조직했다. 이런 네트워크가 앞으로 정부 대응에 반대하는 저항의 네트워크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던 미국의 반자본주의 단체 ‘마르크스21’도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다. ‘마르크스21’은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 무료 치료,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 제정, 의료 보호장비 생산을 위한 생산의 사회적 재배치, 유급 병가 보장, 월세 면제, 강제퇴거 반대, 인종차별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

노동자들도 싸우고 있다. 얼마 전 비행기 엔진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 해고될 위험에 처하자 엔진 공장

을 인공호흡기 생산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지방정부가 휴교령을 회피했을 때 교사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했다. ‘아마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일하라고 지시한 사측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간호사들이 의료 보호장비를 확충하라며 시위를 벌였고, 피츠버그시의 청소 노동자들도 작업장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싸웠다.

노동계급은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를 바꿀 힘과 잠재력이 있다.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가 돼 투쟁을 고무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죽고 살지가 결정될 것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김영익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1월 북한 정부는 국경을 봉쇄했다. 또 감염 위험에 노출됐거나 감염에 취약할 사람 7000여 명을 의학적 감시대상자로 지정해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최근 북한은 국제 구호단체들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그리고 이미 확진자가 생겼을지 모른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북한이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말이다.

1990년대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재에 시달려, 북한의 공중보건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핵·미사일과 달리, 공중보건 같은 인민의 안전은 북한 지배관료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기도 했다.) 이 점을 우려해 북한 당국은 신속하게 국경

을 단았다. 그러나 국경 봉쇄로 대외 무역이 막혀서 경제와 식량 수급에 타격을 입을 듯하다. 북한 당국 스스로 북한이 “극악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북한에서 확산된다면, 북한 주민이 입을 피해는 매우 견잡을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엔지오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지적했듯이, 대북 제재가 북한을 코로나19 위협에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감염병 대처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매번 받아내야 한다. 금융 제재 때

문에 의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기도 현금을 전달하기도 어렵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요지부동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통령 명의로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19 대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북한 대중에 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는 쪽은 북한 정부라면서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G7) 정부들과의 회의에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단결을 촉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냉혹한 우선순위가 보인다. 또한 미국의 북한 ‘인권’ 운운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북한 주민이 코로나19로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 대북 제재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등으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말고 즉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김승주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고, 무급휴직 피해 건수도 4배 이상 증가했다. 해고와 ‘권고’ 사직은 더 많이 늘어서 3월 하반기에는 가장 높은 비중(20.4퍼센트)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3월 15일~21일 사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무급 휴가와 연차 강요가 여전히 증가 추세인 동시에 해고·권고 사직 비율은 3월 첫째 주에 견줘 3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기업주를 위한 ‘통 큰’ 100조 원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업주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매출 타격이 심한 항공업에서는 일찍부터 무급휴직, 임금 반납 등 노동자 희생 강요와 하청업체의 해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4월 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나KO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다.)

“사측은 유급휴업 공지 4일 만에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그 강요에 따르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항공사를 포함한 관광운송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휴업 수당의 90퍼센트까지 지원(고용 유지 지원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 유지 지원금은 노동자



고통 전가 중단하라! 택배, 배송,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과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3월 3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들이 아니라 기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제때 모두 지급될지는 기업주들 손에 달려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수는 17만 명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배제됐기 때



해고 통지 받은 동산병원 계약직 노동자

문이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타 업종’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기업주들은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휴업 수당 지출마저 꺼리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보다는 무급 휴직이나 해고를 더 ‘남는’ 장사로 여기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한 대구동산병원에서도 ‘병원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식당 노동자 등 계약직 50여 명이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식당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동산의료원분회 조합원인 이화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구시가 우리 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나서, 병원 측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 준다고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열떨결에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보름 만에 문자로 해고장이 날라 왔어요. 병원은 대구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구시도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체 피해 사례의 극히 일부뿐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총은 ‘쉬운 해고’와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주 지원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 당장 밥벌이가 중단돼 생계 유지가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늦고 적게 지원하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 모두 기존 사회를 이룬 우선주의에 따라 운영해 온 지배자들의 책임인데 왜 피해와 희생은 노동자부터, 구제와 지원은 기업주부터란 말인가?

이런 기업주들과 문재인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노동자들은 감염병과 해고의 위협 모두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신간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칼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정호중 외 지음
정호중 역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제안)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환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